

제370회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30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현안보고 ..... 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외교안보 현황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코자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무단 침범은 한일 간의 갈등을 이용코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무역체제를 부정하는 일본의 무역 보복은 엄중히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 있어 한미일 3국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를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의 근저에 있는 문제에 대해 양자 간에

보다 빠르고 심각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위급에서 비선 외교를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우리 안보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전시에도 외교가 진행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어딘가 출구를 찾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겪어 보지 못한 복합적인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외교부장관님과 통일부장관님은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안사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TV를 통해 오늘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능력에 희망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1. 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교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현황과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경산성 발표 이후 7월 4일부터 우리 측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의 수출허가기준 강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7월 24일 마무리하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

련하여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계기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아직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동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금번 발사행위에 주목하면서 북측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참석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 우리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외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외교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외교부 차관보는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하여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양국 간 우의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러 측의 설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 측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대내 동향입니다.

북한은 7월 23일 신규 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데 이어 7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습니다. 이는 5월 이후 78일만의 시험발사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4.1%로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있으나 시장물가와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정헌법이 공개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북한의 국가성 강조와 대안의 사업체계 삭제, 내각의 역할 강화 등입니다.

다음,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훈련과 F-35A 도입을 빌미로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현재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지난 판문점 회동 시 발표된 일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이후 정치·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

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국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3쪽,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시·도지사 협의회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화와 경제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협력, 민간정책협의회 등 체계적인 협력들도 재가동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교류협력 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일 날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포럼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와 안보 현안을 이번 아세안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또 일본과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정말 외교력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책임감을 정말 막중하게 느끼면서 이번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지금 준비하고 습니다.

○**원유철 위원** 오늘 아침에 조간보도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번에 불턴 보좌관이, ‘한국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잠정 결정’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 보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원유철 위원** 7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600km가 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가공할 무기체계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 30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0km 밖에 떨어져 있는 수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유사시에는 전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동맹이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일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인질로 될 수도 있다는,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ARF 회의에서 이 점을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한테 얘

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 방위비분담금만큼은, 이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입장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상업적인 가치로 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한미 어느 국가의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만 갖고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그러한 분담 결정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도 아니고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구호라고 할 수 있는 ‘we go together’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이제 우리도 유럽식, 나토에 있는 유럽식 핵 공유를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 공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된다, 방위비분담금과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가 한미 핵 공유로 가는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 그런 식으로 미국과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진지하게 협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불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공감기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뿐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들이 그날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트럼

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 한국 핵무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되어서 협상을 할 때 나토식, 지금 나토에는 미국이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5개 국가하고 핵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한미연합사가 운용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국과 미국이 핵 공유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1분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윤상현** 예, 1분.

**○원유철 위원** 그렇게 한미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제안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당시 우리 당의 방미 특사단으로 가서 미국의 마이크 로저스 전략소위원장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 확장 억제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에 나토만 핵 공유를 하지 말고 한미도 핵 공유 형식으로 해서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마이크 로저스 당시 미국의 하원 전략소위원장이 아주 긍정적인 제안이다라고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되어서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미국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의견을 포함해서 이번에 ARF 때 폼페이오 장관과 이 문제도 포함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토식의 그런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승소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소송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피해자들이 제기를 해 가지고 항소심까지는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다가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 가지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관계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예견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이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졌을 때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대응책이 뭐라는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를 비롯한, 그 정부에서도 그러한 체계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대응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했다 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외교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하나하나한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교부장관께서 보실 때 일본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분은 국민에 대해서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등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가 방치를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매일 매시간마다 대책 회의를 강구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앞세워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외교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부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그것이 상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을 또 공개할 수 없는, 그게 다 협상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하셨듯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말 거의 매일 다양한 레벨에서 지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혜 있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에 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번에 기간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듯한 보도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소미아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경제보복에 대해서 안보 협력관계도 파기를 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현명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5년도에 최초로 한일회담을 개최해서 청구권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난관이 있었고 장애와 애로가 있었는데 그런 심정과 자세와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과 관련된 경제보복 조치가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사할린 동포 문제라든지 또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65년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가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위안부 협상은 우리나라가 파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왜 일본이 다시 재협상에 참여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법리적으로·명분적으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대북정책,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운전자론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데 축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또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역할이 운전자논커닝 조수 역할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은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말이지요, 우리는 운전자론이나 촉진자·중재자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월 28일 날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노골적으로……

1분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상현**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노골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하고 바로 상대하겠다, 관여하지 말아라, 오지랖 넓은 간섭을 하지 말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외무성 국장급 관리가 반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7월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대한 남북 당국자,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고

가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라고 지금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법률적으로 효력 발생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신과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NSC에서 발표한 성명이라는 게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이 정도 말밖에 없고 우리의 입장과 북한 행동에 대한 자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주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북한에 대해서 왜소한 입장이고 너무 비굴하거나 저자세 입장이 아니냐 이런 비난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협상이 재개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시행될 이른바 캐치올 규제는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적국인 공산국가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

롯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분명히 부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복적인 것으로 저희도 분명히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고 이미 취해진 조치들이 철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크게 봐…… 양국 관계를 파탄 내더라도 우리의 경제를 목 조르겠다, 이게 지금 일본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선전포고라고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우리 피해자인 원고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협의 노력은 지속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만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외교부의 서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우리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 일 측의 조속한 조치 철회를 지속 촉구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일 측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한다, 범부처 차원의 국내적 대책 마련에 노력을 지속한다, 또 앞으로 대응 방안도 대체로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하겠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대한 타격이 임박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일본이 우리에게 전쟁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가는 보복을 하겠다’ 하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 대응은 매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오관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만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강력한 공격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경고를 해야만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가 대외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사흘 뒤인 8월 2일 날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외교부 보고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흘 뒤의 일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여러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장관께서도 내일모레 아마 일본 외교부장관을 만난다고 그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되시겠지요. 그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흘 뒤에 전쟁 선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와서 ‘잘해 보자’ 이런 말만 가지고 과연 상대방을 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 일본이 만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적대적인 조치를 확대해 간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이상가는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장관께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그것은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윤상현**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까 이미 답변하셨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답변하셨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이 GSOMIA 연장 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임박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사흘 동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흘 뒤에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나 일본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보복 조치 내지는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다 유념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장관님, 내일 출국하십니까, 방콕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송영길 위원** 지금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송영길 위원** 조율 중에 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3자 회동도 추진 중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꼭 되도록 미국을 좀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GSOMIA 문제도 우리가 보복 조치를 넘어서 폼페이오 측이나 다른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논리는,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GSOMIA를 유지하겠다고 스가 장관이 말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미국으로도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 측이 이것을 방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3자 회동이 성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는 싱가포르에서 했던가요, 작년 회담 때는 한미일 관계가 안 되고 호주랑 3자 회담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3자 회동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도 이것을 방치할 문제가 아님을 정확히 주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공감대 이게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고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될 텐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시간이 정해진 것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을 빨리 좀 추진해서……

제 생각에는 오사카 G20 회동에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차가 약간 있는 건데 그것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연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그렇지 않고 내년 초에 도쿄에서 아베 총리의 국민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 없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외교가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서는 G20 계기 양 정상 간에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확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외교부로서도 조속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9월 11일 열릴 동방경제 포럼에 대통령께서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희 참석에 대해서.

○**송영길 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가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가게 된다면—사실 아베 총리는 거기에 참석하게 될 텐데—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푸틴 대통령은 9시간의 비행을 거쳐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실 텐데—우리가 두 번이나 불참하는 것은 우리 외교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KADIZ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러시아 공식 입장은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 문제도 객관적인 우리 공군의 위도 좌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 볼턴이 와 가지고 방위비 협상 50억 달러 이야기한 것 전혀 없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 구체적인 액수 갖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트럼프 스타일로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50억 달러 이야기를 이미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0차 SMA가 4월 5일 발효되었는데 7월 4일까지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지나가 버렸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행합의서를 지금 미국 측에서는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상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듣기로 미국 협상팀도 우리 협상팀한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혹해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서……

저는 사실 방위비 분담 협상의 트럼프 대통령 논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5만t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쌀을? 공식으로 통일부에 북쪽에서 무슨 연락이 왔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WFP하고 북한하고 일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WFP 평양사무소 측에 북한 측 관계자가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든가 무산시킨다든가 연기한다든가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서한이나 기타 등등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송영길 위원 지금 개성공단의 우리 연락사무소에 나가 있지요, 사람들이?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북측은 안 나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측은 나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나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송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이 안 됩니까, 통일부하고?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부소장 회의라든가 또 연락관 접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북측 공식 입장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그냥 언론 상으로만 5만t 안 받겠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WFP와 관련해서는 외무성 소관이고 그 부분은 대남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북측의 이런 자세는 상당

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 식량 지원 방식은 WFP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WFP하고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WFP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것은 안 받겠다’ 북측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800만 달러 유니세프를 통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송영길 위원 집행이 이미 됐습니까?

아무튼 남북관계도 이렇게 북이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미봉남 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아무튼 이것을 통일부장관이 좀 지혜롭게 뚫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잘 합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연내에 사실 개성공단 복원 문제와 금강산관광 복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미국 간에 어떤 공감대나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외교부장관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공식 요청이 왔습니까, 존 볼턴에게서?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식 요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미 측이 주요 우방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호르무즈해협이 우리의 원유·LNG 공급선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길 위원 저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과의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협상

탈퇴는 국제성으로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서 저도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국제사회가 다 합의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 가서 합의한 사인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만 북한이 도발하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미국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무장관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까지 해서 5 플러스 2, 7개 나라가 합의한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IAEA나 국제기구가 이란이 핵합의, JCPOA를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긴장을 유발시켜 놓고서 파병 요청한다는 것은 완전히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을 침략했던 그런 시기를 연상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제가 엇그제도 이란 대사와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해 봤는데 이란 측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적대 의사가 없는 나라인데 이란이 지금 석유 대금으로 IBK 7조 원의 대금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로 쓰지도 못 하고 억류되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 23일 날 독도 부근에 있는 KADIZ 영공을 러시아 항공기 또 중국 군용기 이렇게 침범을 해 왔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날 NSC도 열리지 않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는……

○유기준 위원 NSC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그때 개최를 했고 정작 필요한 NSC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의논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NSC 상임위는 그날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외국의 항공기, 특히 우리와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 온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날 NSC를 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의논하지 않았던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 상임위는 안 열렸지만 국방·안보 부처에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안보상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격화로 인해서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 KADIZ 무단 침입,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입 등으로 우리나라 외교가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봉착한 상황인데……

먼저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가 성추행을 해서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1건이면 그럴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것 이외에도 지난번에는 에티오피아 대사인 가요, 성추행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파키스탄대사관에서도 고위 외교관이 이런 일을 벌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지금 공관장 비위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도현 베트남 대사, 도경환 말레이시아 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한 혐의로 지금 해임 처분을 받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정재남 몽골 대사, 한국 브로커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혐의로 중앙정계위에 회부된 상태……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

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하고, 국기를 거꾸로 게양한 적도 있고, 또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말한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 가서는, 말레이시아 가서는 인사말을 인도네시아어로 잘못하게 하는 이런 실수들이,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외교부가 거의 ‘사고부’, ‘참사부’까지 이렇게 전략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 장관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계속해서 이런 정말 불미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이 사안이 접수가 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또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2년 동안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었고, 조사가 되었고, 징계가 되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강경화 장관, 제가 그동안에 외통위를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소위 말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교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외교 참사들이 각각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기강 해이까지 벌어지고 또 직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수위를 넘어서서 8월 2일 날 일본의 각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런 강령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개 품목만 수출 규제를 하는 심사에 넣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종래의 것이 그냥 소충이었다면 이것은 거의 원자폭탄에 가까운 그런 조치로서 그 품목만 해도 지금 한 천 몇 개가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

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종래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을 판이하게 다르게 하고 한일 국교 수립에 있어서도 한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보도는 ‘특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두 번 왔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두 번 왔다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여러 레벨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 확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장관 답변을 누구라도 이해를 하지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듯이 비쳐지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까지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TV조선에서 ‘한일 특사, 이미 두 차례 이상 교환 방문했다’ 이렇게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세요. ‘특사는 아니고 실무진이 방문을 했다’,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보도가 좀 다른 사항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해 줘야지요.

1분 더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보도에 관련해서는 외교부로서는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보고가……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장관이 좀 있으면 방콕에 가서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시간을 조율……

**○유기준 위원**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유기준 위원** 미국 장관하고는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지금 시간을 맞춰 보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가능성 몇 % 정도 됩니까? 상당히 높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하고는 어떻습니까? 가능성 높은 편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장관끼리 만나는 것을 주선하기 위해서라도 실무진이 접촉을 해서 언제 만나고 어떤 주제로 논의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TV조선에서 보도한 이 내용이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특사라고 표현했지만 실무진의 접촉이다 그것은 확인을 해 줘야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회담을 위해서 실무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기준 위원 실무진이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입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부당함 알리고 또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게 외교부와 잘 이렇게 업무 분담이 돼서 그러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는 이런 일보다는 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더 확고한 입장을 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들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요?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GSOMIA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 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GSOMIA를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신중히 지켜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간에 사이가 나빠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대응 원칙 훌륭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당당히 임하면서 바로 그 일환으로 만약 이런 사태가 오면 GSOMIA도 즉각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장관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때 2~3주 지나면 곧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그 이유가 뭐니까? 보도되고 있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뭐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또 북한도 실무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렇게 보면 뭐 좋습니다. 이런 큰 문제, 실무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도되는 데는 일단 우리가 8월로 예정하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나름의 불만 표시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또 최근 미사일 발사라든가 등을 놓고 볼 때도 그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전술·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덮어 가지고 덮어질 일이 아니고,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대행위라고 보면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스텔스기 도입 또 한미 군사훈련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 편을……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북핵 비핵화 문제라든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보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확대

되어서 거의 군축 문제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형식적으로 4·27 합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적으로 넘길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위반하는 거라면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규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권 위원**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무적 측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군사적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 미사일이 갖는 특성, 거기에 대한 우리의 효율적 대처에 대한 정부 나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100여 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둘러싸고 있는 4강들 어느 한 나라도 우리하고 같이 궤를

같이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국민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병자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했고 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무역보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재자나 같은 편을 들어야 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6일 날 한국 등 10개국을 WTO 개도국 지위에서 중단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동시에 또 다른 무역적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일부 성과도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마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경고다’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민들도 전부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대일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원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작년 10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어떤 대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관께서나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였습니다.

장관께서 사법부 10월 달 판단 이후에 일본이 보복조치를 하기 이전까지 일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일본은 외상 차원에서 또 실무국장 차원에서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장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또 피해자들의 배상권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 기본 틀 내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병국 위원 아니, 발신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제안을 했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본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정부가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의 그런 기본 입장하에서……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제 결과……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 당국 간에는 계속 합의를 하자 하는 공감대 있었습니까.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결과론적으로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는 초지일관 대법원…… 저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우리 국내에서의 문제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국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내리고 나서 허둥지둥 그다음부터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그 판결 이후에 국제적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런 조짐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바로 규정을 했지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것은 유엔 제재조치를 위반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과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병국 위원 아니, 그 제재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건 제재위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의 탄도……

○정병국 위원 그 제재를 위반했잖아요. 그 제재를 위반했는데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는 그 뒤에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 등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의를 현장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매번 제재위의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바라보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은 결국은 ICBM,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거나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결국은 핵동결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이러한 우려를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도 우리랑 목적이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정병국 위원 자, 좋습니다.  
8월 2일 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외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다음 액션은 어떤 플랜이 있나요?

(이수혁 간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병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현재 현안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이 문제를 이제는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국제재판소에다가 부의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윤상현 예,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쨌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검토를 하면서 결과는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또 한일관계를 관리하는 데, 더욱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본 잣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만약에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은 양국관계 악화는 정말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정병국 위원 이게 양국 법의 충돌이고 결국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재판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이게 몇십년 동안을 여기에서 끌려서 한일관계에 그때그때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이 싫어하는 쌀을 왜 굳이 주려고 하는냐. 왜 주려고 합니까? 이것 국민들의 질문이에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이 WFP에 요청을 했고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했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고 우리 정부에……

○정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선의로 5만t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국민에게 설득을 하겠냐……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은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는 왜 줘야 되는지, 주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은 뭘지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정부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달라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WFP의 요청에 호응을 했을 때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김연철 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이 지금 단거리미사일 발사하고 또 쌀 5만 t을 안 받았다고 그러고 남한에 대해서 ‘한국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심사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석현 위원** 기업인들 방북을 허용한다고 발표까지 했었는데 실제로는 방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개성 못 가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이석현 위원** 북한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북한의 우리에게 대한 섭섭함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얘기도 하고 또 스텔스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에서 적절한 중재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돈을 다 받아서 모아서 주면 벌크머니지만 관광객들 개별로 받으면 벌크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들 생각했던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꼭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좀 특별히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대북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좀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서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보면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안보리 규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까지 전부 미국 눈치만 봐 가지고는 남북 간에 북한이 섭섭함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정말 중재 역할을, 미국 뒤따라가는 입장보다는 중재 역할을 해 줘야 북한도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존 볼턴 보좌관 왔었는데 방위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정확하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원론적인 그런 양측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 측 내부의 검토가 지금까지 분담금 협상을 해 왔던 그 방식, 새로운 방식, 이런 협상, 이런 검토가 종료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석현 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무 얘기도 안 하려면 뭐 하려와서 방위비 얘기를…… 그러면 방위비 얘기를 한 것이 없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방위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인데.

그러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측의 설명이 있었고 미 측의 이해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반응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표명하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으로서는 한미 또 미일동맹의 중요성 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연스럽고……

○**이석현 위원** 자기네가 중재하겠다는 얘기는 않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재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미 측으로서도 또 지난번에 스텔웰 차관보도……

○**이석현 위원** 한미일 공동안보와 관계가 있는 일인데 자기들이 그냥 뒷걸음……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자기들은 중재 안 하겠다는 것으로, 존 볼턴이 말한 것으로 나왔지 않

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명시적으로 중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시다만 하여튼 미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저희 입장을 설명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미국으로서도 역할을……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했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관계에서 이런 요청을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거기에 납득을 시키는 것이……

○**이석현 위원** 아니, 외교관계에서 요청을 못합니까, 미국한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요청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미국도 우리 입장을 듣고 또 일본 입장을 듣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석현 위원**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는 안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호르무즈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다’, 또 우리도 그 지역의 안정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원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 상당히……

○**이석현 위원**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은 ‘호르무즈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에 한국이 동참해 주는 것을, 저희가 그 논의에 여러 번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요청은 없고요. 뭐 하려고 왔는가 모를 일이네.

그다음에 러시아 영공 침범, 그것 기계 오작동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는 분명히 영공 침해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국방 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분명히 영공 침공으로 우리는……

○**이석현 위원** 기계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러시아 측의……

○**이석현 위원** 침범한 것은 아는데 우리 외교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러시아 측에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받아 봐야…… 국방 측에서 접수가 되면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처음에 무관이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입장이 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영공 침공이었고 그 원인이 어찌 됐든지 분명히 영공 침공이었다는 것은 국방……

○**이석현 위원** 그것만 인정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국민이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뭔지 모르겠다고 여야 위원들이 다 물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정확하게 뭐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윤상현** 1분 더 올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정부로서도 검토를 하나요, 그 부분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 상황전개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소미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외교부에서는 얘기 안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왜냐하면 한미일 공동안보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외교부가 직접 거론을 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앞으로 해결 가능성이나 또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서 외교부는 그것은 덮어놓고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일본 총영사 성추행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외교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장관이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어져요. 그것은 장관이 너무 유해서 그렇습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과거의 경우들을 보면 분명히 지난 2년 동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많이 조사·징계가 된 것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관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또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진정권이……

○이석현 위원 과거에는 안 드러났던 게 지금은 드러난다 이건가요, 과거에는 숨어 있던 사건들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쉽게 이런 사건을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내부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피해자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이런 사건들을 본부에 접수를 시키고 본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그런……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하고도 겁나서 제기를 못 했는데 지금은 장관이 부드러운니까 제기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부드러워서라기보다도……

○이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좋으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것은 그런 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고 피해자들이 훨씬 더 안심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석현 위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끝으로 하나만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동아태소위원장도 만나서 볼 때 그분들한테 부러웠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국무성하고 수시로 의논들을 해요, 국회가. 그런데 우리는 외교부장관이 우리한테 의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의견 좀 내려고 전화를 해도 회신도 안 줘요. 왜 그래요? 소

통을 좀 해야지요. 국회를 경계만 하지 말고 소통을 하시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 나름 다 공부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고. 외교장관만 나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무슨 의견을 물어보기는커녕 내가 의견 좀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성 비서가 회의 들어갔다고 하던데 회신을 안 줘요, 지금까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 연락 오면 제가 반드시 답신은……

○이석현 위원 아니, 했는데 내가 거짓말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이석현 위원 사오 일밖에 안 됐는데, 삼사 일전에 따라다니는 수행비서가 지금 회의 들어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신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회신 안 줘요. 그리고 나한테 용건이 뭐냐고 물어 봐요. 그래서 ‘외통위 위원들이 전화하면 으레 용건을 먼저 물어보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랬더니 아마 기분이 안 좋아서 보고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수행비서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아마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하시라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장관이 이렇게 무능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한 것까지 막 유출하고 성추행 수시로 일어나고, 한일관계 이렇게 미묘할 때도요. 장관이 그런 식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쌀 5만t 북한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기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가 소요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저희들이……

○유민봉 위원 그것 빨리 답변 안 됩니까? 그게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회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 국내산 쌀값을 적용하고……

○**유민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400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양곡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민봉 위원** 1400억이면 우리 5000만 국민이 1인당 얼마 부담하시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양곡특별회계는 가격을 국내산 쌀값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내부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은 좀 정확한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 결정이 남북 교류추진협의회에서 서면심의로 끝났더라고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이런 정도의 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교류협력추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인 경우에 당연히 서면이 아니라 실제 면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그 사안의 중요성, 국민 부담을 고려했을 때 지켜야 될 절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WFP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6월 19일 발언내용 중에 보면 ‘사실은 정부와 북한과 WFP 3자 간에 일종의 삼각대화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의 삼각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느 정도 북한이 이 상황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직접지원이 아니라 WFP가 관여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부와 WFP가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WFP하고 북한하고 또 업무협약을 맺는 그런 두 번의 업무협약을 통해 갖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WFP와 북한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WFP를 통해서

식량지원을 하는데 포대에 표기되는 것은 결정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것은 북한도 수용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포대 문제는 국제적인 관례가 있고요. 또 WFP의 과거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쌀이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것은 WFP하고 북한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또 특히 인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나 궁극적으로 위협 없는 상태에 도움이 되고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북한이 지원을 거절한다? 공식적인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통일부 입장은 됩니까? 지원받지 않겠다는데도 지원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 부분은 하여튼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 대응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제주도 감귤 200t 보낸 것에 대해서 외신 보도에 보면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괴뢰가 보내온 감귤은 전리품이다’. 내부적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보여 줄 것입니까, 통일부에서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실이 확인된 뒤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러시아 국적 시앙하이린 8호 북한 억류 사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민봉 위원 아마 통일부에서는 한국 선원 2명을 송환하라는 요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답변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기본적으로 이것은 러시아 선박입니다.

○유민봉 위원 아니, 러시아 선박이라도 우리 한국 국적의 선원 2명이 억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통일부에서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통해서 송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데 북한에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답변은 없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락사무소를 통한 답변도 없고 그러면 다른 답변은 있었습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저희 외교당국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부를 통해서……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귀환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 선원 송환된다는 것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러시아 선사가……

○유민봉 위원 그것도 러시아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쌀 지원이라든지 한국 선원 억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목선이 남쪽으로 표류되어서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런 선원을 하루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돌려보낼 정도로 북한에 굉장한, 좋은 말로 배려이고 심한 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송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 담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통일부장관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 어선이 표류하거나 왔을 때의 조치와 또 우리 어선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통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국방부도 해당이 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을 때 ‘남측에 대한 경고다’ 했는데 우리는 9·19 군사합의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변호를 했고 심지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했지요. 러시아 항공기 우리 영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범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무대응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청와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모두가 대한민국의 존재감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대한민국 국격의 위기가 지적되어야 되고 또 이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차관보가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에 대해 적극, 즉각 조치를 해서 깊은 유감 표명 또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공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외교 과제라든가 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주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민봉 위원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외교부에서, 통일부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발언 그것은 국민에게 가슴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것은 오히려 공군 대위가 대응 매뉴얼대로 위협 사격한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지금 대통령, 청와대, 각부 장관이 실질적인 국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이, 그런 것이 국민한테 읽히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외교부장관,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터진 최악의 혼란시기, 혼란 일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상황이 매우 엄중한, 다양하게 복잡한 과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일·한중·한러·한미 간에 이렇게 드러난 일들 하나하나가 봐 보면 상당히 치명적이고 과거에 그렇지 않았었던 적대행위를 서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외교, 꼭 섬나라에 갇혀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외교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고 있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죽창이나 의병으로 풀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북한도 우리가 외교와 대화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세력들한테도 대화와 외교로 푸는 것을 국가 정부의 원칙으로 했는데 청와대 인사가, 청와대 아주 실세가 죽창과 의병, 국채보상운동 같은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 것처럼 선동을 하고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외교의 공간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과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중재위 얘기입니다, 중재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떨 적에는 어차피 그리 돌아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결국에 가서 그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재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재위로 가자고 주장하면 친일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주장이 꼭 어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중재위로 가자고 해서 문건을 만들면 일본에 대한 항복문서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방안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안을 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익이……

○이정현 위원 중재위로 가면 우리가 지게 됩니까? 지금 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굉장한 시스템과 또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또 굉장히 법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본 법원 판결하고 우리 판결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중재위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중재위나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것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정현 위원 그런데 왜 중재위로 안 가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국제적인 분쟁 절차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사실……

○이정현 위원 아니, 예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WTO라든가 이런 데는 다 예단을 해 가지고 자신 있으니까 갔고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가지 않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WTO에 가는 무역이나 경제문제 분쟁은 과거의 예들도 많이 있고 우리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그동안 외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에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이라든가 중재위로 가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외교의 일반적인 길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제사회의 틀에서 봤을 때는 국가 간에 분쟁이 있으면 그런 분쟁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또 과거에 그런……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 경우 중재위나 재판소를 가는 것도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도 국제적인 분쟁절차를 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정현 위원**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도 그런 국제재판소의 존재를 부인합니까, 그 가치나?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전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국제사회 모두가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중재위나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교부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방안도 함께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무역을 포함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8월 달에 또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8월 내지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기차가 부딪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양쪽에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 동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나 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는 상당히 부당하고 설명이 안 되는, 정당하지 못한 조치라는 데 대해서 즉각 철회 그다음에 추가조치 중단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동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법절차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아까 국제사회에 가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합이라고 하고 적법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 방법도 적법 중의 하나니까요.

또 다른, 세 번째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민들은 ‘외교부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과 사설에서, 칼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주로 멘트를 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고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민정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1분 더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또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처보다는 주로 수상 관저에서 얘기가 나오고 수상 보좌진들이 거의 이 문제를 결정하고 부처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쪽의 대통령을 포함한 BH와 일본의 아베 수상을 포함한 관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챙겨 보고 계시는 사안이고 아마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국 양 정상의 의지가 있어야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메모 좀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교포 54만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의 영사들을 포함한 대책을 세운 것과 비교했을 때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호르무즈 파견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 그리고 GSOMIA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 정부 측 아직 결정된 게 아닐지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제일 동포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차원에서 매일 동향을 또 혹시 우리 동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챙겨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GSOMIA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우선 일본이 통상 제재·제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거기 가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근거를 대라’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전략물자에 대한 여러 통제, 즉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일본이 제기했는지 또는 제재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전략물자를 가지고, 대개 석탄 문제이고 사치품이지 우리가,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간 그러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역공을 지금 취하고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국 측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도 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일본이 하고 있는지 것인지,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분명히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여튼 외교부로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와라 하는 입장입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라든가 경산성 차원에서 물론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혁 위원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그걸 물어봐도, 일본 정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읽고 그걸 보여 줘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내라, 우리가 무엇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하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고 있다든지 하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더, 그동안 해 오셨지만…… 오해를,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오해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이 ‘신뢰가 깨졌다, 한국은 믿을 나라가 못 된다, 약속을 위반하고 또 전략물자도 그렇게 북한에 보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재조치를, 규제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빼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일기본조약 5조에 보면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바탕 위에 한일관계를 정립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관계로 보지 않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본조약 5조를 위반하거나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우리가 깬거나 일본이 지금 깬 건데 그에 대해서도 기본조약 5조를 가지고 원용해서 일본에 대해서 공격할…… 공격이 아니지요, 일본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 조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5조를?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5조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분석한 것이 실무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까지 보고가 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뭐든지 다 조약·협약의 어느 조항을 원용해서 상대방을 규탄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니까, 이걸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깨는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기본조약 2조에 1910년의 그러한 일본의 여러 조치들을 우리는 불법적이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은 아니다…… 이미 무효를 확인했다 하는 조항이 2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의 ‘이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주 모호한 부사를 써 가지고 지금 한일 간의 법률적 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 ‘이미’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합의는, 널 앤드 버이드(null and void)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합



의가 무효일 뿐이 아니라 그 합의로 인한 식민지 배는 불법이었다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본협약에는, 기본조약에는 이런 해석상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절차가 없어요. 청구권협약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이나 그게 실패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해석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장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다시 한일 간에 협의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나 모델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볼턴의 방한에서 분담금 문제, 그러니까 5조를 요청했다……

강 장관한테는 요청한 게 없고 청와대나 국방 장관한테 요청했는데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정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정부 누구한테도 볼턴이 5조 얘기한 게 아예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실장 또 국방장관, 저 이렇게 차례로 면담을 했습니다만 다 같은 내용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2조라면 또 몰라도 5조를 요청했는데 그냥 모호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권위를 위해서도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게 합당한 대응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있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수혁 위원** 아니, 앞으로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조를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수혁 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나토 5개국의 핵 공유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나토에는 있으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핵 공유가, 지금 나토에 배치돼 있는 핵의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거의 미군이 다 사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데 한국에는 유독, 1992년인가 전술핵을 철수한 그 이후에 미국은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전연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이유, 나토에는 배치했으면서 한국에, 한반도에는 배치하지 않은 이유, 아직까지도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면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나토의 집단 안보체제하고 우리의 양자적인 상호방위조약하고는 근원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미국 결정에 달린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술핵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가 돼 왔고 그런 입장을 기본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한반도에서 다시 그런 핵무기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일본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은 지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손에 잡히는 어떤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전이 안 보인다, 국민들은 자연히 불안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형국입니다. 또 8월 2일 날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될 경우에는 한일 경제 문제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사태의 최종적인 수습을 위한 해법은 정치·외교적인 해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지혜를 모으

는 건데 뽕족한 어떤 수습안이 지금 잡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이 국면이 상당히 장기화돼 가지고 양국 간에 국민감정이 격화되면서 말하자면 전쟁론이 지배하는 국면이 장기화되는……

사실은 외교부의 노력도, 외교 목표라는 것은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어쨌든 이 사태를 타개해 나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감정이 격화되는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평가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년 한일 협정대로 중재위에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 보복을 가하겠다고, 이것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가 시간을 좀 벌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금화를 약간 유보시키는 그런 조치를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만 정부가 관여해서 현금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좀 유보하는, 그래서 협상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는 없느냐는 제 질문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기는 저희 기본적인 원칙, 사법부의 프로세스는 존중하고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 피해 측에 그런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그런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정부가 할 수 있

는 걸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왔는데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정부가 어쨌든 이 수습안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결국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핵심 주제였습니다마는 한일 경제 분쟁 문제도 결국 대화 메뉴에 올랐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바로 그런 시기에 방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주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정진석 위원 불턴을 통한 미국의 인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한일 경제 분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이던가요, 미국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우리의 설명,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설명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고요. 또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 이 시기에 미국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응을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자관계 또 3자 업무를 전담을 하는 스틸웰 신임 차관보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어떤 시점에서는 미국도 좀 더 구체적인 중재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이 어떤 판단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확인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런 어떤 경제보복 조치를 지나치게 취하는 여러 배경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장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한일협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 기본 틀에 변화를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리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 전통적인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의 태도를 보면 이런 우방국들로부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과연 이 한국이 전통적인 동맹 협력관계인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소 이탈해 가지고 다른 변형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한·미·일 3각 체제와 북·중·러 3각 체제는 3 대 3의 스테이투스 퀴우(status quo)를 이루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 대 3.5로 변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 한미 동맹이 공고함에 대해서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로서는 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한일 간의, 양자 간의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3각 안보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위원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도 보고를 받았습시다 마는 총리가 연설을 하고 또 서명하고 이런 결정 절차를 거치기까지 한 3주 정도, 21일 정도의 시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거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된다고 즉각 발효되는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주 후에 발효되는 거니까 그 억압에라도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오늘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외교 당국으로서 외교부로서 한일 경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성안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협상안을 외교부가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

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이야기가 초반의 이야기하고 최근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안 하는 상황에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즉각 철회 그리고 추가 보복 조치 없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내심으로서 는 얽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 일본은 안보에 있어서는 방위성이 목소리를 내고 GSOMIA 관련해서 지속하고 싶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과거사 강제 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외무성 고노 외상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위원회나 또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최고 헌법기관인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개인이 사기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강력하게 보호받는 재판청구권의 작용이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또 경제산업성이 나서서 WTO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등 산업적인 대응을 하고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정치·외교적으로 잘 풀려면 일본의 법적 문제제기에 대한 허구성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외교부 내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미 외교부에서는 그런……

○추미애 위원 법적 대응 팀이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르는 중재위에 갈 사안입니까, 이것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소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은 소진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검토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시작도 아직 안 한 사항입니다.

○추미애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법적으로 한번 따져 볼까요? 우선 한일협정, 대일 청구권협정 당시에 그것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었고 또 포괄협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또는 피해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국제 정세에 따른 정치 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일본도 역시 그런 문제를 회피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한일 간에는 당시에 정치협상을 한 것이 공통적으로 양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도 포괄적으로 정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민관조사 합동위원회가 열려서 한일청구권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반인도적 불법행위, 국가 공권력이나 또는 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했었고 또 2005년도에 민관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도 그것을 판단에 참고를 한 것입니다. 맞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중재위 사안이 아니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양국 간의 최악의 해석과 시행에 대해서 양국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외교적 경로를 따르고 거기에 외교적 경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중재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절차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국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겁니다.

개인이 강제징용을 당한, 불법행위를 당한 개인이 일본 사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득을 본 사기업에 대해서 불법행위상의 청구권을 행사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 대 사기업 간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시행에 따른 또는 해석에 따른 분쟁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체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 헌법기관이지요. 헌법기관이 헌법과 또 국내법과 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 아까 그 청구권협정 조약이지요. 이 조약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예요. 이 최종 판단, 확정판결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그 하위법인, 조약은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하위법입니다.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서 재판한 것을 가지고 다시 그 하위법인 조약에 따라서 기속시키자라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이것은 3조 1항 해당 사항이 아니다. 외교적 경로로 봤거나 거기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대상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자 하는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도 역시 국가 간의 분쟁 사안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개인이 사기업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인 거지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그런 분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은 국가적으로 위안부가 됐든 강제징용이 됐든 강제동원이 됐든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앞장섰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그리고 멸실하기를 기다렸어요. 생존자들이 사망하기를 기다렸어요. 이 강제징용 원고도 그 생존자 중에 몇 명,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기다린 쪽에서 이 증거재판주의에 임하는, 증거재판주의로 재판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나?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 패전국이라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추미애 위원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 가서 벗어 버리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법적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참 많

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해석, 그런 분석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간의, 65년에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추미애 위원 알았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이후에 2005년의 우리 정부의 입장 또 우리 대법원 판결, 결국은 마지막 있는 판결이 우리의 가장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그 지침서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 2005년의 조치 또 청구권협정 이 정합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좀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1분 더 넣어 드려요.

○추미애 위원 1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화 즉시 보복하겠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WTO에서는 또 전혀 실무회담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1 플러스 1 제안은 그럼 뭐냐? 그것이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그런 제안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일본에 수혜 받은 기업 또 당시 65년 협정 이게 경제 원조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도, 혜택을 받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라는 대안을 정치외교적으로 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성질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이거를 일본과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두 분 장관님과 또 우리 두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수월해야 국가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국민들 마음도 편할 텐데 요즘…… 하여튼 모두가 다 수고도 많이 하지만 국민들 마음도 그만큼 편치가 않아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에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이 조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라든지 조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자기들이, 말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분명히 아베 수상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처음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판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하니 우리한테 저렇게 반사적으로 보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차제에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흔들기 시도 내지는 향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 손으로 우리 경제나 이런 것을 흔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떤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일 측 지도자들의 얘기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보복성의 수출규제 조치다 하는, 보복적인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우려라든가 우리의 부당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즉각 철회를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복이 이루어진다고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결정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그 부당함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조치가 철회가 안 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외교적인 협의 노력이라든가 자제력만으로써 상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로 치닫고 견잡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김재경 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은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있는데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맥락 없이 그냥 말씀을 해 버리면 그것은 제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어쨌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업, 우리 경제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번에 국가가 총력적으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내에 특위를 다 꾸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민주당의 특위 이름은 ‘경제침략특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일수출규제대책특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지만 시각차가 조금, 제목부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계속적으로 아마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도 펴야 되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제가 추궁하듯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아주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

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한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백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부터, 지난번에 과장급들이 일본에 가 가지고 회의를 했다던가 그 기사 보니까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외면한 채 앉아 가지고 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총체적으로 전면전인 거지.

뭔가 물밑 아래에서는 그래도 이야기라도 전하고 뭔가 속마음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싸워 버리면 도대체 누가 나서 가지고 싸우지 않고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향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이미 불을 대로 붙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제3국의 중재,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게 미국을 의식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은 이론이나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1분.

○**김재경 위원** 이론이나 이런 데는 밝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 느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하고 트럼프는 골프도 치는 사이고, 그리고 요즘 트럼프가 WTO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를 개도국 지위에서 빼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미국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풀어 나갈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강 장관님, 적어도 외교부는 싸움의 전면보다는 그래도 뭔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슬기롭게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분명히 외교는 외교로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함도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서로 윈윈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장관님, 우리 한일 갈등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러시아 영공 침해 등은 시간적으로는 겹쳐서 발생해서 위기의식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막연한 위기감을 키우는 것도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조치였고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공 침범은 중·러 간 군사협력 강화 시도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출발이 다르다, 그래서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사건은 분명하나 단기적으로 막연한 위기론에 따른 과잉 대응보다는 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외교적인 과제들의 연원이 각기 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온 점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면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 위에서 외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들은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롭고 심각한 안보적인 도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남방 삼각 그리고 북·러·중의 북방 삼각에 대한 구도가 있었다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이 부드러워지는 관계에서 다시 신냉전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남방 안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가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저희가 계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외교적 문제.

그래서 보면 아까 현안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국민의 90%가 지금 우리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지요. 물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라 경제에 얼마큼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본 국민의 의식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측 그리고 또 산업부,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외교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회의를 하시니까 산업부 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가질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기에서 3개 부품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시작했으면 우리도 가장 아픈 데 대해서는 다 전략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대항해서 3개 정도는 언급을 하면서 저쪽에서도 겁을 먹고 또 일본 국민도 자기네들이 피해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접근이고요.

정치적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국민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WTO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중재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또 이번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정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오면서 50억 불에 대해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제가 지난번 369차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액션을 취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 특히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은 미군 공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미군 공여지가 96%, 172km<sup>2</sup>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가 84%입니다, 144km<sup>2</sup>. 그래서 스물두 군데의 미군 공여지 중에서 열여섯 군데는 반환이 됐고요, 여섯 군데는 아직 반환이 안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외교부가 SOFA의 틀 안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지자체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만 속히 반환이 되도록 SOFA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를 만들면서 거기 공여지들을 반환하고 그 비용들로 해서 결국은 험프리스를 지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미국 측에 얘기가 돼서…… 방위비분담금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적 정서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제 여건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냉전 구도로 굳어질 수도 있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척점에 있어서 동북아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교황의 방북 이런 것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추진된 게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마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정 조율이 이루어진다고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박정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박정 위원** 통일부장관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인 노력들은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가 풀리면 외교적인 문제들도 다른 구실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런 차원에서의 우리 통일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24일 날 광역지자체 단체장들과 통일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협력 합의서, 같이 노력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박정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들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시·도지사협의회와 통일부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방정부하고의 협력은 분권형 대북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 분권과 협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가 주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구요.

그다음에 많은 지방정부들이 상담과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지금 외교부 노력도 있지만 통일부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다른 각도에서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줌으로써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삼 주 후에 협상이 시작될 거다' 그랬는데 벌써 4주가 지났어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언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발표였는지에 대한 것들도 밝히실 수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회담이 끝나고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얘기했었고 또 곧이어 폼페이오 장관도 7월 중순쯤 있을 거다 하는 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재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미·북 사이에 재개를 위해서 계속 소통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장관님 오신 지 이제 한 4개월 돼 가시나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정양석 위원** 학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또 대북관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의욕 있게 활동해 오고 장관에 취임하셨는데 어떠세요? 장관이 되기 전과 장관이 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북관계 또 바랐던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전문가로서 분석하는 것하고 정책 담당자로서 분석하는 부분들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양석 위원** 글썄요, 전임 조명균 장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셨고 우리 김 장관님 오셨는데 그 뒤에 의도하는 만큼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많겠다, 또 대통령께서도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다른 어떤 외교안보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뒀는데 좀 안타깝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금년에 한 일곱 달 동안 우리 남북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우리 북남선언을 잘 이행하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1월부터 타미플루 지원이 무산되고, 그다음에 2월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3월·4월에 와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중단되고 또 공동 추진키로 했던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도 우리만의 단독으로 4월 1일 날 됐어요. 그 이후에 장관께서 취임하셨는데……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왔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이 금년 들어 첫 발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하겠다는 지원에도 불응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판문점에서 또 역사적인 모임이 있었지만 외무성에서는 슬슬 ‘앞으로 한국이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프게 말을 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북한 선수 오지 않았고 쌀 지원도 거부했어요. 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런 사태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개성에 있는 공동사무소에서 정례적 접촉

은 되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일상적으로 연락관 접촉이라든가……

**○정양석 위원** 그렇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별로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북관계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망을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문제인데, 그래도 답답한 상황인데 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의지나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 말씀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통일부도 남북관계의 재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차분하게 준비하시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잘됐다고 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부도 이런 상황에서는, 또 북한 축하하고도 하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남남 사이에 소통은 없었는지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야당에 의해서 해법은 없는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정양석 위원**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휴가도 취소하고 곧 있을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는데 결연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고 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 대처하는 문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맞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것은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 또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는 베이스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장은 맞지만 우리보다 더 보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일본이 당장 리스트에 올리면 한 언론에서는 200

역 불이라고 합디다만 우리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외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마땅하다. 그런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외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정말 진짜 외교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대국이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었으면 과연 우리도 또한, 우리 사드 문제 그때 경험해 봤지만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정양석 위원 내부 논리 넘치고 넘쳤는데 외교적으로 후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도 외교부가 나서서 외교적인 해법을 우리가 강구하겠다고 하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연합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것을 보고 좋아할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잘 아실 분인데 한국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의 외교가 한 일곱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우리 현 상황과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과도한 민족주의가 있어서 보편적이고 세계적 관점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여론도 살펴봐야 되고 또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것이 우리 외교의 걸림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늘 많이 듣는 따가운 비판 중의 하나가 왜 장관이 안 보이느냐인데 ‘우리 외교의 문제가 청와대가 다 해 버린다. 청와대가 전부 주도하고 정작 경험 많고 훈련된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부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위기에 외교부가 한번 실력 발휘를 하실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가 보이든 안 보이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정부 내에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율에도 참여를 하고 또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의 이런 외교사안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아주 참여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대통령님의 의중이 결국은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의중 그다음에 관계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각 제안이라든가 전문적인 견해를 다 모아서 조율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나기 전입니다만 본 위원도 외교부장관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8월 2일 날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일단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을 때 그러면 검토에 들어갑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뭘 꼭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저는 계속해서 들리는 뉴앙스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우리도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려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답변드릴 내용대로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대로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 장관님, 지난 7월 25일 북한의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것 사거리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거리가 600km를 넘은 것으로 저희들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우리 국방부의 1차 발

표 때 사거리가 몇 km라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2개가 1차 평가가 조금 달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430km로 나왔습니다. 원래 600km가 날아갔는데 400km밖에 탐지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결국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 군사정보를 받는 것이 북한이 쓰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협정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저는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지소미아가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메커니즘이 아니냐,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결국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동맹의 신뢰성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것이고 미국 측의 비난이 있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KADIZ와 영공을 침범해 오고 또 일본하고의 사상 최악의 관계 속에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모든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여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상현** 지금 같은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한다면 일본은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한국을 패싱하고 배제하고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새롭게 편성하자'라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외교적으로 되치기를, 역치기를 당할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간에 2014년도부터 발효 중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함부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장관님, 한일관계 해법으로 장관님은 특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사가 되든 어떤 협상의 메커니즘이라든 메커니즘 또 협의가 결국은 어떤 안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 있는 것이지 무조건 특사가 파견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카드를 쓴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오히려 지금 같이 한일 간의 갈등상황이 심각하고 또 그런 상황 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것이 가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전혀 모르게 일본 측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갈등, 정쟁의 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측도 수출규제 중단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심사 중단을 결정하고 우리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금 청산하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을 확정하고 그리고 협상의 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안도 충분히 유념해서 정부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법부의 프로세스는 정부가 중단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사법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원고로 나와 있는 서른일곱 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 한국·일본이 현재의 갈등 상황 하에서 결국 대한민국에 미치는 국익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정부 내이나 청와대에 건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고노 타로 일본 외무장관은 우리나라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입장을 죽 기술했더라고요. 장관님은 일본 아사히나 요미우리하고 인터뷰한 내용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외교부에서 국장님들이나 이걸 만들어서 우리 장관님도 일본 언론에 나와서 우리 입장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이 사실상 계속 그들의 논리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계없다, 징벌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의 국가안보나 정상적인 절차를 위한 거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만주사변 때 노구교 사건이나 유조구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뻔히 보이는 것을 저렇게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정확히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런 것 좀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여기 일본 특파원들을 불러다가 같이 브리핑하시든지 해서 저는 일본 국민들에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내외 언론에 대해서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성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에……

○**송영길 위원** 특히 저는 상대적으로 고노 타로, 우리나라 언론은 왜 그렇게 잘 실어 주느냐 그 말이지요. 고노 타로 외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일본 입장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 언론들은 잘 설명해 주는데 과연 우리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응조치로서 그것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정부 입장은 이때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안 측하고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송영길 위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

더라도, 실제로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27개 국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아시아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테 그러면 대한민국 이외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쪽도 다 일본이 교역을 하는데 거기는 비백색국이지만 포괄적 승인을 통해서 사실상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백색국가에서 설정 제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고시를 통해서 구체적 절차에서 포괄적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도 일부가 존재합니다,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아무튼 일본을 설득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통일부장관님,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죽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이번 이스칸데르 발사가 9·19 군사합의에 위반된 겁니까, 우리 남북 간의 합의에?

○**통일부장관 김연철** 위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9·19 합의를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이런 것들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군사분계선 일대 5km 이내의 포병사격훈련 이런 것들은 금지돼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게 이 5km 이내의 영역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북측에서는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한미 간에 공군 군사훈련을 했지요. 맥스선더 훈련을 변형·축소시킨 훈련을 했는데 그때 동원된 비행기가 몇 대 정도였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확하게……

○**송영길 위원** 저는 한 4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도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측은 9·19 합의 위반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요.

이번에 우리가 FX사업으로 F-35A를 40대 도입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한 10대 들어와 있습니까, 배치된 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건 아마 군사 사항인 것 같아서 국방부에서 확인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를 해 놓고 서로 안 지켜 버리면 그 합의 하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가동시켜서, 서로 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는 허용된 것인지, 남북 간의 합의가 어디까지 된 것인지 이것들을 정리 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다고 보여지고요.

지소미아 얘기도 나오지만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돼서 남북 간에 군사합의가 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일본군의 정보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민족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사실상 일본 자위대가 헌법적 근거도 없는 군대인데, 일본과 군사 협의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요미우리 사설을 보니까 러시아 공군 폭격기 온 걸 가지고 왜 자기 영토에 대한민국 공군이 요격을 했느냐라고 비판한 사설 읽어 봤습니까?

김연철 장관님, 읽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읽어 보지 않았습니니다.

○**송영길 위원** 요미우리 사설을 보시면,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러시아와 대한민국을 같이 공격했어요. 왜 자기 나라 영토, 다케시마가 자기 나라 영토인데 자기 나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왜 자기 나라 영토인데 대한민국 공군이 요격을 했느냐고 같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사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군사교류를 해 가지고 북을 견제하자 이런 논리, 저는 통일부장관의 그런 과제가 크다고 봅니다. 빨리 9·19 군사합의가 합의되면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군사적 신뢰를 남북 간에 쌓아 가면?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9·19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호르무즈해협 방위연합군을 창설하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해 왔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이니셔티브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우리 정부에도 요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EU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각 나라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U 차원의 공식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오전 질의에 장관님께서 우리 국익에 맞게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심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심재권 위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래도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쿠웨이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심재권 위원** 호르무즈해협의 통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의 창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EU 자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서방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내부에

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지향해야 될 바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가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견적으로 어떤 이슈를 놓고, 예를 들면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를 놓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연찮게 인연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백두산 화산 분화 문제를 놓고 제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기 10세기에 대분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통계를 보니까 무려 서른한 번이나 그런 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다시 분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심으로 해서 또는 EU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때 우리 정부 차원이나 통일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북측에 대해서 이런 민간 활동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자라든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든가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동조사나 또는 학술 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남북 간에 다양한 교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포츠 분야 포함해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더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백두산 화산 분화 문제에 대한 이런 연구는 아주 시급하고 또 북측으로 봐

서도 조금도 망설일 그런 게 없다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 연구기관들에서 그런 부탁들을 해 오셨길래 통일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통일부가 서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북측과 민간 사이드에서 연구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자라든가 북측도 그렇게 나서 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안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외교부장관님,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의 결과가 외무부에도 보고가 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의원님들 현장에서 하시는 게 수시로 전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번에 제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 한·영국 의원외교포럼 회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하고 영국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가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던 원전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국 의회 내의 APPG, 뉴클리어 에너지 소속 상하 의원들 여러 분을 만났고 영국 핵산업 학·협회 사람들도 만났고 에너지 정책 담당을 하는 국무상—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이지요—차관도 직접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됐다가 이게 무산이 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기반한 측면 속에서 과연 이게 이삼 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십여 년 이상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던데. 그런 것을 저희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 저는 이번에 가서 우리 의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 왔던 탈원전 정책의 정치적 함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체코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원전 수주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이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지금 이게 다시 논의가 재개가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최근의 상황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저희가 현안으로……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의원님들 다녀오신 것 잘 보고받았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장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외교부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답은 산자부와 KEPCO의 업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게 외교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외교부는 이런 전후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어느 부처의 또는 어느 기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갈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오면 저희들의 보고서가 다 관계 기관에 갈 거란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파일화시키고 축적을 해 가지고 어느 누가 갈 때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에너지 담당 국무상을 만났고 또 APPG 뉴클리어 에너지 소속 의원들을 만났을 때…… 지금 존슨 수상이 당선됐잖아요. 당선이 되면—그분들 요구사항이에요—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런 거라고 하면 조속히 한영 간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대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보고를 하도

록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진행을 하면서, 강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질서 속에서의 자기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영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의…… 일단 현장에서의 의원외교 활동 노력에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새 리더십이 바뀌면서 영국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노력 또 예컨대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문안을 타결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위급의 외교적인 정상 이벤트라든가 또 신임 외교장관과의 면담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언론을 보니까 오전에 장관님 발언이 ‘지소미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미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방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체결된 지소미아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 지소미아는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깨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지소미아까지 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복을 한다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깨 가면서 간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 이러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된다 하면 상당히 파장이 있는……

○정병국 위원 파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철회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또 일각에서 보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불참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도쿄올림픽이 도쿄에서 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지 올림픽 정신은 전쟁 중에도 올림픽에 참여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여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은 결국 서로 손해, 우리 기업뿐이 아니라 일본 기업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루즈루즈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원인으로 가야 된다 하는 기본 전제를 갖고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통일부장관님, 앞서 5만t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1400억 정도인데 그중의 한 1000억 정도가 이미 정부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을 주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계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민봉 위원 그렇지만 정부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의 경우에도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구

매해 놓은 것입니다. 1400억을 5000만, 일인으로 계산하면 일인당 2800원이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2800원의 부담을 지면서 지금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당당한 우리 한국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WFP의 지원을 거부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부하면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도 더 이상 한국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국민의 자긍심을 최선으로 지켜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하여튼 저희들이 WFP랑 협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좀 당당하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전쟁이다라는 용어로 청와대 참모도 썼고 여당의 지도부에서도 썼습니다. 경제전쟁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아직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된다, 저도 그 정도로 완화시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뭔가 전략적 각오가 서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조심성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누가 치릅니까? 정규군이 치러야 되고 관군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유하자면 자발적·자율적 의용대를 동원하고 의병을 모집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쟁을 치르려면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장수기를 세워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군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백성이 최소한 응원하고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정부와 청와대가 최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이나 이



런 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제품을 판매하고 일본식 식당을 경영하고 일본 여행을 알선하는 그런 여행사의 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지인들은 한편으로 굉장한 불안과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이라는 식으로 완전 과장되게 대응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무능입니다. 정부가 사전에 대응을 했어야지요, 제대로.

이 상황이 벌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이 앞장서서 의병처럼 나서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분명한 역할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은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물러 보이지 않도록 특히 외교부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국가가 물러 보이지 않겠습니까? 외교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지요.

일본을 대하는 10분의 1 정도로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이럴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냅니까? 정부 당국자가 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가 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은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 정서를 분노로 결집하는 그런 것은 대한민국도 일본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이때 중국 당국자, 중국 의원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민 정서를, 반한 감정을 유발시키지 말아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처음에 국민 정서가 동원될 때는, 분노가 동원될 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를 좁힐 뿐입니다. 특히 외교부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좀 더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권의 과잉 반응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물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외교 전략도, 정책도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만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에 맞게 또 정확한 정세 판단하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이번에 러시아 항공기 영공 침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안의 전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봐 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더러 위원님들께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를 안보협력 대상으로 안 보는 것이니까 지소미아도 그럴 때는 폐기하는 게 맞다는 주장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국의 공동 안보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교부로서는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것이 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복안을 두고 있다고 볼 때 거론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은 중요한 것인데 방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얘기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신문에 이번에 존 불턴이 50억 불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모를 제시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 보도들이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5조 9000억 원이 되니까 현재의 5.5배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 그게 어디서 근거했다고 보냐 하면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50억 불어치 미국으로부터 안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로 5억 불밖에 안 내는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게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방위비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서 줘요. 만일에 반미 감정이 널리 고조된다면 미국에도 이로울 게 없는 거거든요.

또 이참에 한미 공동방위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방위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 주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지켜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바운더리의 최전방에서 우리 한국이 공산주의와 맞서 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를 미국이 다 한국을 지켜 주고 있으니 심지어 한국에 배치되지 않은 전력까지도, 미국에 있는 전략자산도 한국을 위한 것이니까 다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억지 논리에 대해서 당당히 싸워야 되고 그런 것은 외부 관계를 고려해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구체적인 금액 제시가 아니라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으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국민들처럼 똑똑한 게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그냥 미국이 막 요구한다고 끌려가는 입장이 되거나 그것을 쉬쉬해 덮는 쪽으로만 가면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침에 얼핏 나왔듯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었다’,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파병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파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맞서고 국민 여론을 반드시 듣도록 환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맞서 나가면……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정말 슬기롭고 정말 강력한 대응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장막외교를 해 갖고는 우리가 백전백패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픈해서 공개하면서 국민과 함께 맞서 나가면 공동방위를 하면서도 우리 주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통일부,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남북 간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2년 반 동안 만났던 정상회담이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두 달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게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으로 보내려고 했던 쌀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우리 청와대의 주인—주인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겠지요—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해 가지고 정말 꼭 아랫사람들 부하직원 나무라듯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훈련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한반도 영공을 침범해서 1차 사격을 받고도 보란 듯이 또 다시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우리가 언제 침범을 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통일부장관이 생각하시는 평화고 이게 종전입니까? 종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종전 선언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이정현 위원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안심시키게 한번 얘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종전’이라는 단어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다 경고를 해서 그러지 마라고 해야 됩니까? 어

떻게 정부 대책은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평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뒷받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정현 위원**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정현 위원** 지금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었던 한미동맹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나 어떤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또 외교부는 북한에서—우리 정부도 인정을 했듯이—탄도미사일을 쏘서 유엔 안보리에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작년에 비해서 5배나 넘는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을 공개적으로 일단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 주지 않은 때문인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전략무기 전개를 거의 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한미훈련도 거의 하지 않았습시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에 대한 그런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가 됩니까? 장난입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이러한 안보 불안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보고 속으로만 떨고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국방부도 또 정부도 외교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매뉴얼에 맞게 국제사회에다가 또는 미국에다가 협조 요청할 것은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국방장관 차원에서 멘트가 나왔습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결국은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겠습시다만 저희는 미국 등 현장 유엔 차원에서 중요 나라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북 평화적인 해결

을 모색하되 또 한 축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북 틀을 존중하면서 나간다 하는 것도 저희 전략의 한 큰 축이 되겠습니다.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당하게 저희가, 물론 우리가 동맹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 동맹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공평한 분담금을 협상해 나가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난번 불타이 왔을 때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말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주문을 하셨듯이 저희는 당당한 저희 입장을 갖고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익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윤상현** 예.

○**이정현 위원**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장관님 답변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시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재판이 끝났고 11월, 12월 동안 당황했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외교부가 충분히 나서서 일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본은 대화를 굉장히 원했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무관심, 무대책,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전략을 갖고 나갈까? 만약에 둘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 지난 몇 달 동안 외교부와 정부가 아무것도 무대책이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고심을 했고 사법 절차를 지켜 나가면서 고심 끝에 저희가 일본의 어떤 안을, 이것을 놓고 협의를 해 보자 했을 때 일본이 그것

을 수용하지 않았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출 규제 조치에는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 조치 자체는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철회를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상대측과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레벨에서 수시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번에 ARF 계기에도 일정이 조율돼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을 강하게 개진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입장을 반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새로운 변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가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프로세스는 중단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일본이 어떤 안이 있는지,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또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속 다양한 레벨에서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제가 참 장관님들 앉혀 놓고 가르치는 이런 질의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답답하니까 내 말이 길어지고 우리 위원님들 심정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뒤에 오는 이들은 내가 왜 4강 정상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제발 살펴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는 실수 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와닿는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어

요.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관님은 선거를 안 치러 봐서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선거 치러 본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관방장관입니까, 국방장관이 GSOMIA에 대해서는 일본은 유지하는 쪽의 입장을 갖다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목소리를 확 낸다고 이게 강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유기체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리 얽혀 가지고 큰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뭐 거기도 강은 조절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일본 문제, 이 복잡다기한 일본 문제를 너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김연철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김재경 위원 북한이 쌀 안 받기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도 북한의 실질 GDP가 97년 이래 21년 만에 가장 낮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물론 북한의 속내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 감정을 건드리면 서까지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속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직까지 WFP하고 북한 당국하고 명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혹시 무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은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WFP와 북한 사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장관님의 어떤 열정 그리고 옛날에 활동한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장관이 되신 이후에 북한과의 접촉이라든지 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존재감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사업이고 또 남북한 서로 간의 여러 가지를 맞춰 보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난관에 봉착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장관님 능력이 이렇다저렇다 언론에서 분명히 평가를 할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소위 아주 밀착된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 없어요? 속내를 알아야 뭘 풀어낼 것 아닙니까?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것 풀어내기 쉽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뭐 남북 간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등등등으로 우리 국민들 심기가 불편한데—저도 마찬가지로—어차피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또 시작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또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참 실망스럽고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빨리 좀 뭐가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우선 북한의 이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1항의 무력 증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김연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

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장관님, 우리 F-35A 도입은 무력 증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1조 1항에 있는 무력 증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F-35A의 도입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은 F-35A 도입에 대해서 그것을 구실 삼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한을.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만나는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논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 답이 궁해 가지고 클리어한 그런 답을 못 줄 때들이 왕왕 있거든요, 충돌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론치스는 하지 않도록 2013년의 결의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보리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

비공식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겠지요, 전체회의가 열려서 토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런 얘기를 국무부에서도 또 들었는데 그 논의의 내용이 이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까, 제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까, 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입니까, 아니,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 없고…… 한국이 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리 차원에서의 논의는 아무래도 제재에 대한 논의가 되겠고요. 이 미사일 사양에 대해서는 우리도 군 측의 보고에 따라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만 한미 당국 간에 좀 더 분석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같이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안보리는 지금 뭐를 논의하고 있

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무래도 안보리 차원에서는, 안보리는 정치적인 그런 논의의 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의 어떤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한 안보리 논의 역사가 죽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혁 위원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지금 일본은 27개국 이 그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는 몇 나라가 포함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는 스물아홉 나라인 것으로……

○이수혁 위원 어느 나라가 더 추가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29개, 우리를 포함해서……

○이수혁 위원 일본보다 지금 두 나라가 더 많은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한 모든 나라 30개국을—우리를 포함해서요—우리로 우대 국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몇 개 빠져 있는 27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어느 나라가 빠져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나라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 중에 일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터키, 우크라이나로 돼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싱가포르를 포함돼 있지 않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싱가포르를 4대 수출 통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이수혁 위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지금 산자부 자료를 보면 이번에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 GATT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30개 국가들은 그러면 GATT와 WTO 규정에 어긋나는 무역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화이트리스트는 특별히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이런 통제 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우대 조치입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와 다른 그런 어떤 우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무역 차별하는 조치입

니까, 화이트리스트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이 산자부 자료는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GATT와 WTO의 정신에 위반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규정에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맞잖아요. 이 자료는 산자부 자료입니다. 제가 외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차별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마 자료를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맞지를 알아 가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시겠지요?

제가 지금 화이트리스트 한국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화이트리스트는 일본만의 제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가지의 수출 통제 규범에 가입한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한국도 리스트가 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보복적으로, 일본도 전략물자 북한에 수출된 게 있고 하니까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일본의 그 조치가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그런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제외했다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같은 조치로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을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는 있다, 우리도 그런 화이트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도는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외교적으로 눈 대 눈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 거니까 그 점도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주선 위원** 지난 5월과 7월 달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달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7월 발사 내용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탄도미사일이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한국 안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안보에 상당한 그런 함의가.....

○**박주선 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 안보에는 위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히 위협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탄도미사일이 전반적으로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안보리가 취할 것이냐 안 취할 것이냐.....

○**박주선 위원**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안보리 결정에 따르지만 유엔 대북 제재의 내용에는, 제재의 대상은 일단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소지’라고 꼭 붙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말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5월 달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모든 나라가 다 하는 시험이다’ 또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는 경고를 보냈지만 미국에는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 위협이 된다면 한미방위조약 협정상으로

도 그렇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로 본다면지 비핵화를 견인해야 할 우리 한미 간의 공조 문제로 보더라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워닝을 주고 제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런 방침이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간에는 외교 또 국방 당국 간에서는 공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주선 위원** 아니,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표명이라든지 우리 입장을 또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에 외교부장관이 뭐 이렇다 저렇다 즉각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미동맹의 그런 어떤 기본 근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제 상대역에 대해서나 외교 채널 통해서 분명히 저희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행간을 보면 ICM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안 되고 핵실험을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촉에 성과가 있고 하는 식으로 내년 대선에 이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1950년도의 애치슨라인이라는 것이 미국의 태평양·동북아 전략 때 한반도 방위 대상에 빠져 있어 가지고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도, 진단도 있는데 지금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도 ‘어느 나라든지 다 발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시험에 불과하다’,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 ‘미국에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한미동맹에 큰 균열이 생겼거나 미국의 태평양·동북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거나 또 앞으로 미국에만 겨냥이 안 되고 미국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탄도미사일, 단거리가 됐든 중거리가 됐든 북한이 계속 발사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는 사전에 천명 아닙니까, 이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칫 잘

못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불러 가지고 이미 한국은 미국 동맹의 우산 속에서 아마 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1분 더 안 주세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미국의 내락을 받고 한국을 길들이기 내지는 신 경제침탈을, 패권전쟁을 지금 시동 건 것이 아니냐, 신 경제 식민통치하를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하고 맞닥뜨려진 것으로 추상이 되는데 외교부장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애치슨 라인이 그어졌던 1940년대 말의 우리 한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역량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도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 능력의 기본에서 모든 사안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능력은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오판의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전달하고 견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응답을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있는 사안을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잉 해석을 해서 과잉 반응하는 것도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하고 증거 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야말로 원칙을 갖고 저희 입장의 기본에서 계속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

**○위원장대리 이수혁**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현 위원** 예.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께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고 계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장관만 알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우리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질의응답이 왜 필요합니까, 전부 신문에 난 그런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들으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한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장관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할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못 들을 얘기가 뭐 있습니까? 장관에게 그 부분을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이정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셔서 다음번부터는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간담회를 요청하시면 간담회를 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고, 조금 대외로 비밀스러운 얘기도 대외비 그런 모임에서, 회의에서 개진해 주시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다음에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오전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 집행될 경우에는 중재위나 또는 ICJ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논리적 무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WTO에서의 우리의 대응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제1조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 되겠지요, 백색국가에서 지정을 초래할 경우에. 그리고 또한 GATT 제10조 3항 무역 수출규제는 일관성이 있고 공정하며 각 나라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또 한편 일본이 ‘약속 위반, 신뢰가 없어졌다’ 그다음에 ‘안보이익이 우려된다’ 하는 것은 다분히 GATT 제21조에 각 주권국가가 안보이익에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이 종전까지는, 종전은 언제를 의미하느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철도와 도로 수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때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제기했던 WTO 제소에 대해서 안보이익 우려의 남용을 경고하면서 ‘상호주의에 기반해 자유무역질서, 다자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가 WTO에 제소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기 4대 통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확산 체제, NPT 비확산 조약이나 또는 MTCR 같은 이런 것의 모범국가입니다. 이런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잘 가동이 된 이후부터는 안보이익 우려라는 21조가 잘 원용이 되지를 알고 있어요. 그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회박해진 겁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이 노멀 타임이나 아니면 전시냐,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아무런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정상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승소를 하고 제소를 한 우크라이나가

졌습시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WTO에 대응 시는 정상 시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안보이익에 대해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국가·모범국가임을 잘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이해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다음, 통일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이미 쌀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맥스 선더—옛날 이름은 맥스 선더이고요 이름이 바뀌어서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훈련으로 바뀐 거지요—그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추미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훈련이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전개됐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군사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주도해서 보낸 쌀인데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달았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후에 계속 북한의 동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군은 어떠했으며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지 역할 분담을 해서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파악 안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 북한의 담당 부처의 실무자가 WFP 평양사무소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WFP에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미애 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쓸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수혁** 예, 1분 더 하시지요.

○**추미애 위원** ‘위게임(wargame)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관에서 출격하는데 무려 6시간이나 비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트럼프의 관점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일부장관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한

미관계에 선순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관계 악순환으로 스위치(switch)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잘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선순환으로 이끌어 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가 한미 간에 마땅히 해야 될 훈련은 하면서도 이것이 남북 간에는 긴장요소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통일부장관의 역할은 없을까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번 군사훈련은 기동훈련이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지휘소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외교부장관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는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또 ‘그런 액수를 들은 바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액수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고 그 액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와서 협의를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예측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예고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생각해 보면 작년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또 달라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때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은 적게 내는 것이 좋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통용이 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때 1조 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1조 원 조금 넘게 됐지만—그런데 어떤 과정인지 5년 단위 협상이 1년으로 바뀌었던 말입니다.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작은 것 집착하다가 오히려 큰 걸 놓친 건 아닌가, 상황이 좀 불리해진 건 아닌가 내 이런 생

각 들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될 텐데, 사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 외교부의 전문가들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의 입장을 미리 안다든지 혹은 좀 우호적이면 다들 뭐…… 이 정부 들어서서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교부로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늘 우리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총액형이나 소요형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이 차체에, 또 미국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당당하게 소요형으로 하자.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군사작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것으로 혹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시스템을 소요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부분 답변 보다는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외교부가 방위비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국방부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본은 어때요? 한번 좀 봐 주시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제가 히스토리를 한번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국방부가 미군들 앞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낸다.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에 할 말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서 외교부가 하라, 많은 협상을 해 본 외교부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군사작전비용이라든가 진짜 소요형이 들어가면 우리 외교부가 또 이것을 붙들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외교부 내에서도 한번 입장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우리 한국군이 과거처럼, 과거에 그렇게 미군의 영향력에 있어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우리 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사작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가 나서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요. 이 사안이, 비준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군사작전에 들어간 비용을 사실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심의도 사실은 좀 형식에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습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교부가 작전비용 또 훈련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위비 협상에 관한 시스템도 좀 바꾸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작년 10차 협상도 쉬운 협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1년으로 했던 게 미국이 하여튼 이 분담금 협상 틀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새로 정립된 틀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1년간으로 그 기간이 한정이 되는 상황이었습시다만 이번에는 더욱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당장은 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위킹그룹도 만들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킹그룹을 어떻게 가동시킬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또 일본 케이스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또 과연 이것을 외교부가 계속 주도를 해야 되는지, 외교부가 주도는 했습니다만, 국방부의 전문가들도 전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지난번 협상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협상의 틀도 저희가 한번 재고를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예.

○정양석 위원 이 문제도 그렇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이 WTO 개도국의 대우가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의도를 불편하지만 잘 알고 또 미국을 잘 아는 외교관들이 웃을 벗고 난 뒤에, 하여튼 외교부가 이런 부분이 편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되풀이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잘 아는 분들이 미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또 적폐라는 이유로 웃을 벗었

습니다. 정말 우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외교부가 예측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큰 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 잘해 주시고, 방위비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습을 위해서 상담을 해 봤더니 ‘내역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잘 알 수가 없으면 작전비용, 훈련비용을 유형별로 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10조, 20조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외교부가 잘 대처하시고 국방부하고도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심사하고 또 우리가 낼 것 있으면 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희가 시간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 이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요청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미애 위원님.

그러면 두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이정현 위원 통일부장관, 자꾸 북한이 NLL을 넘어서 어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이상 현상입니다. 혹시 이것이 북한 선원들을 가장해 가지고 해상침투로를 염탐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의심해볼 여지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조기송환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이정현 위원 그러나 그런 대공용의점도 한번 유의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레이더는 잡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도 3000km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 레이더가 못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상으로 600km를 놓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놓치고 말하자면 우리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무기체계로 이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SLBM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잠수함 속에서 쏘 올려서 말하자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미국 영토인 하와이 가까이 가 가지고 쏘 버려도 되고 우리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무기를 개발하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장난감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해 왔을 텐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말하자면 일본이 아주 나쁘게, 정말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과 경제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주변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안보에 해당되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군데가 다 무력이 아닌 경제라든가 또는 안보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역사에 전범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범? 어떤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시에 전쟁법을 위반한 범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전범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전범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경제·무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라든가 무역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도 전범이지요. 그밖에 다른, 어쨌든 그러한 전쟁을 시도하는……

○위원장대리 이수혁 1분? 30초만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1분 갖다가……

○위원장대리 이수혁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제나 무역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나 그밖에 다른, 어쨌든 전쟁을 독려해 가지고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이런 집단들을 역사는 항상 전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이제 21세기에 이러한 전범으로 낙인찍히고 몰리는 이런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많은 발언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정말 최고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외교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외교 사안들마다 정말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정말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인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도 외교부장관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똑같이 외교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과 집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와 염려들을 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포함해서 외교부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와 또 그런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고 자기의 몫을 찾아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외교부 직원들만큼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72년 동안 너무나 잘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외교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주변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그렇고 힘이나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도 밀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정말 외교부의 최고 인재들을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시키고 활용을 하고 앞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내 계속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관님께서 좀 앞장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외교부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내의 그 협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외교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또 외교부는 외교부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하실 분은 김재경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두 분이 더 남아 계십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분담의 정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잘 알지 못하니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어때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이 조금 불분명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CM, 이른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 측하고 미국 파트너들과 같이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요. 또는 주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논의하는 거지요, 미국 측 카운터파트(counterpart)와 함께?

○**외교부장관 강경화** 방위비 협상팀의 팀장은 외교부가 지난번에도 했고 과거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의 전문가도 정말한 팀이 되어서 지난 10차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항상 외교부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당연시하는 것도 저희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은 또 새로운 협상의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우리한테 공식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외교·국방 또 우리 안보부처에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협상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북 측이 이번에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아까 업무보고서에는 아마도 앞둔 8월 5일부터 있을 지휘소통제훈련,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공세적인 훈련이 아니고 방어적인 훈련이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이다. 한미동맹 차원이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북한이 문제 삼는 F-35 스텔스전투기, 그것이 앞서 맥스 썬더에서 전개됐던 B-52 스트라트포트레스나 이런 것보다 위력이 더 센가요, 북한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으로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일단 국내정치적으로도 9·19 군사부분 합의서를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질이 아까 공세적인 게 아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것이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어 줘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적어도 통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쌀 인도적 지원도 거부당한 상황이고, 또 앞서 맥스썬더 훈련 강도에 대해서 하필이면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회담이 있을 때 그 훈련을 했느냐는 시기상의 문제가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목소리를 안 내면 목소리 낼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이것이 남북 간에는 한미 선순환,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 그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의 악순환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맥스썬더 훈련이 아니고요. 8월 중순에 있는 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정확하게 북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맥스선더 훈련에서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는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군 당국자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또 그걸 빌미로 어느 정도 몰밑 접촉도 가능한 거지요. 그게 통일부 역할이예요. 통일부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쌀 인도적 지원은 통일부 소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쌀 문제는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WFP에 얘기를 한 거고 WFP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러시아·중국의 우리 영공 침해, 그 틈을 타서 일본은 또 독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정당이 의원 명의로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아마도 8월 1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각 당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작업도 좀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내가 외교부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러시아 측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러시아는 영공 침입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김재경 위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쪽에 넘겼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드릴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방부 측과 알아봐서 전해 드릴 게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하여튼 그날 논의할 때 좀 더 상

세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의 우리 KADIZ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KADIZ라는 개념이 국제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전 통보의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어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들은 전에도 있었겠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가 이려고 중국이 이려고 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상대국과 해결을, 가능하면 과제를 결국은 키우지 않고 사안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외교적인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위원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도하 각 언론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북한·중국·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 쪽의 동맹은 조금 옛날 같지 못한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어쨌든 8월 1일 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압축된 시간 안에 정부에서 명쾌한 정부의 입장과 논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님, 금년 통일정책연구에 실린 ‘평화 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이라는 논문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민봉 위원 저는 학문의 자유, 학자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냐는 것은 확

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에 우선 실린 내용을 한번 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는 명기되지 않고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를 대신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있다, 북한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유민봉 위원** 정부 입장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다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잘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잘 알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에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는 명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만약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방식을 가정하고 있다면 그런 가정은 평화공존 또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와 상치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자의 주장에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금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8월 1일 목요일 본회의 개의 전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가칭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오늘 현안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김 부 겸	김 재 경	박 정	박 주 선
송 영 길	심 재 권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민 봉	윤 상 현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정 현	이 해 찬	정 병 국
정 양 식	정 진 석	천 정 배	추 미 애

○**청가 위원(2인)**

김 무 성 박 병 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	관	강	경	화
제 2 차 관		이	태	호
기획조정실장		유	대	종
국제안보대사		김		건
원자력·비확산		임	상	범
외교기획관		김	정	한
아시아태평양국장		강	상	욱
동북아시아국장		김	태	진
북미국장		김	희	상
양자경제외교국장		정	연	두
북핵외교기획단장		김	정	하
유럽국심의관				
통일부				
장	관	김	연	철
차	관	서		호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주	태
통 일 정 책 실 장	최	영	준
정 세 분 석 국 장	백	태	현
교 류 협 력 국 장	김	창	현
인 도 협 력 국 장	서	정	배